

[붙임]

##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노총 3대 대책

### Ⅰ 현황과 문제점

- 한국경제가 서서히 회복중이나 백신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경기회복을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여전히 고용불안과 감염위험, 업무상 재해 가능성, 장시간 노동의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보호·보상 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 고용한파 시대를 맞아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고용안정협약지원금, 중소기업 고용유지자금융자사업’이 종료되면서 경기후행적 특성으로 인한 고용위기업종(관광·항공·운수 등 대면서비스업)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위기감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음.
- 필수노동자, 공무원 노동자는 코로나19 감염병을 막아내고자 최전선에서 사활을 다했지만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업무 수당, 비상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에서 배제된 채 차별을 받고 있음.
- 전국민 백신휴가 도입으로 심신 안정과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급 백신휴가가 ‘권고’에 그쳐 필수노동자, 중소기업·하청비정규직노동자, 공무원 노동자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등 고용형태, 직종이나 기업 규모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깊어지고 있음.
- 우리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필수노동자, 중소기업·하청비정규직노동자, 공무원노동자, 고용위기 업종 노동자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과 2차 추경 반영으로 코로나19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경기회복의 속도를 높이고 성과가 고루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함.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발표한 ‘안전한 여름휴가 보내기 노사정 협력 결의’(6.14)에서도 “3. 노사정은....., 고용 유지, 취약계층 보호 지원을 위한 정부 역할을 제고하고, ..... 코로나19로부터 일상 회복을 위해 적극 실천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II 한국노총 3대 대책

### 1.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중소기업 고용유지자금융자사업 예산 증액

-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요건을 21. 6월에서 최소 연말까지 연장하고, 예산 증액

- 중소기업 고용유지자금융자사업 예산 증액

\* 이유 : 21.下, 지원 신청 사업장은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고, 9월말부터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 기간이 종료되어 지원 신청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21년 계획	집행률 (21. 4월)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70억 원	51.5%
중소기업 고용유지자금융자사업	150억 원	52.5%

### 2. 코로나19 수당 지급

-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보수제도를 운영하며 관계 공무원에게 의료업무수당, 비상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중요직무급, 위험근무수당, 성과연봉 등 지급
- 형평성 및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필수노동자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 위험수당 지급

### 3. 전국민 백신휴가제 도입

- 코로나19 예방 관련 백신휴가가 ‘권고’에 그쳐 고용형태, 직종, 산업, 기업 규모에 따라 양극화 심화 현상 뚜렷
  - 전국민 ‘백신휴가’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또는 행정명령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 사업장의 경우, ‘유급병가’ 보장으로 차별 해소
- \* 공무직 노동자의 경우, 병가규정 자체가 없거나 일부(50%)만 유급으로 보장 받는 실정임.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는 ‘무급’으로 병가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임.